

시론



김현성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대표이사

계엄을 온몸으로 막고, 국회에서의 탄핵, 현재의 파면 그리고 국민들의 심판으로 정치적으로 내란은 종식됐다. 장장 6개월여 빛의 혁명의 완성이다. 그러나 긴 내란세력과 사법적 다툼의 시간이 남았다. 그래서인지 6월4일 당선이 확정되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여의도에서 했던 새벽 메시지가 생생하다. ‘공평하게 기회를 함께 누리는 억강부약의 대통세상을 함께 만들어기자’ 내란세력이 우리에게 빼앗아간 것이 물리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해준 선언였다. 내란극복은 군사구데타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다.

내란극복 못지 않게 지금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민생경제의 위기이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는 서민과 자영업자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으며, 국민들의 절망감은 국에 달하고 있다. 비상계엄 이후 숨가쁘게 달려오느라 잊고 있었던 현실은 참담하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광주 경제일자리 기관의 장으로 대한민국 21대 이재명 대통령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단호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한다.

첫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파산을 막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이제 고물가·고금리·소비 위축이라는 삼중고에 짓눌려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30조에 한 곳이 폐업이라는 연쇄 도산은 지역 경제를 붕괴시키고 사회 안전망에 심각한 부담을 줄 것이다. 소상공인 지원은 단순한 복지가 아닌,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투자다. 지역화폐를 포함한 수요혁신 방안 실행 및 단순한 지원금 지급을 넘어, 임대료 및 공과금 부담 완화, 대출 상환 유예의 실질적인 연장 및 저금리 전환, 디지털 전환 및 온라인 판로 개척 지원, 그리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파격적인 정책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 특히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이 비용이 아닌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 배달중계수수료 상한제, QR 주문의 국가 표준 설정 등 현장에서 실효성이 큰 정책들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

둘째, 가계부채 폭탄을 해체하고 금융 취약계층을 즉각 구제해야 한다. 기준금리 인상 기조는 ‘영끌족’과 ‘빚투족’을 넘어, 대다수 국민의 가계 이자 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이는 소비 절벽을 초래해 내수 경제를 파탄으로 이끄는 주범이 되고 있다. 코로나19 시기 국가가 부담해야 될 빚이 가계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전가됐다. 탕감까지 생각하는 근본적이고 전향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금융 취약계층의 재무 재조정 및 재

기 지원 프로그램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셋째, 비상한 각오로 물가 폭등을 막아야 한다. 현재 국민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통제 불능 상태로 치솟는 물가이다. 물가 상승이 장기화될 경우, 가계 소비 여력을 더욱 위축되고 내수 경제는 심각한 침체에 빠질 것이다. 장바구니 물가부터 외식비, 공공요금까지 생활 전반의 비용이 가파르게 상승해 가계의 실질 소득을 낮추고 있다. 특히 서민 생활의 근간인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 안정화를 위해 유통 구조의 혁신적인 개선, 선제적인 수급 관리, 그리고 국제 유가 변동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단기적인 미봉책을 넘어,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항구적인 물가 안정 시스템을 즉각 구축해야 한다.

현재 국민들은 이 대통령의 단호한 결단과 강력한 추진력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경제 지표의 숫자가 아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실제로 나아지고 있다는 ‘체감’이 가장 중요하다. 현장의 절규에 귀 기울이고, 고통받는 국민들의 손을 잡아줬으면 한다. 몸의 중심이 아픈곳이 듯 대한민국의 중심은 고통받는 민생의 현장이다. 오직 민생만을 바라보며 과감한 정책을 펼쳐준다면 국민들은 대통령을 믿고 따를 것이다. 국민에게 임명된 자리인 만큼 국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 주는 효자손 같은 대통령이 돼 주길 바란다. 결국 국민이 합니다.

국민·주민 주권이 마을공동체로 구현돼야 한다

6개월여 동안 가슴졸인 긴장과 불안의 터널을 뚫고 드디어 새 정부가 들어선다. 새정부 앞에는 산적한 과제가 쌓여 있다. 주민자치 시민운동을 하는 필자로서는, 주민자치의 관점에서 새 정부에 바라는 몇 가지 소회를 적어보고자 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국민이 주인이다. 대통령이나 장관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리인이요, 머슴이다. 위탁받은 권한을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만 한다. 마을에서도 주민주권이 실현돼야 한다. 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선거하지만, 자치단체장이 읍면동장을 임명할 때에도 복수의 승진후보자 명부 중에서 주민이 선출하도록 하면 좋을 듯 하다. 주민주권, 주민통제가 궁극적으로 구현돼야 한다.

특별법에 근거를 둔 주민자치회가 시범 실시된 지도 이미 10년이 지났다. 어떻게 시범 실시가 10년을 넘길 수 있을까? 1~2년, 아니 2~3년 실시해본 후 정책과 제도를 보완해서 확대 시행하는 것이 상례 아닌가? 광주는 96개 전동(洞)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됐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부산 등 다른 도시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병존하고 있다고 한다. 주민자치회 근거법이 조속히 입법돼야 한다. 주민주권 실현을 위해 법과 제도에 기반해서 주민자치회 지원을 해 주민자치회가 명실상부하게 주민들의 민주 의식과 시민의식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주민자치 의식의 성숙은 단기간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시민의식의 성숙이 기대만큼 안 되고, 숙성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자치칼럼



서순복

품자주사시민들 대표회장
조선대 법학 교수

2024년 12월3일 저녁 뜬금없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6개월에 걸친 상식과 상상을 초월한 사건의 연속을 거쳐 드디어 2025년 6월3일 대통령 선거를 거쳐 새정부가 들어섰다.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내란종식과 민주한 정질서 회복을 통한 민생경제의 부활이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방자치와 주민자치의 영역에서 많은 후퇴와 퇴보가 있었다. 21년 동안 주민자치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역할을 했던 주민자치박람회를 폐지했다. 또 주민자치 표준조례(안)을 개정해 주민자치회 인력구성을 줄이려 했고, 주민자치 관련 예산과 인력지원도 축소했다. 심지어 대전에서는 사회적 자본센터도 폐지됐다. 이는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에 대한 비뚤어진 부정적 시각 때문이다. 이념을 앞세운 윤석열 정부는 종북 좌파라는 이념 프레임의 구도로 지방자치 내지 주민자치에 대한 시선이 왜곡됐다.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정부의 존재이유일진데, 주민주권을 실현하는 확실한 제도적 장치인 주민자치회를 강화하지는 못할망정 이를 축소 왜곡한 것은 이 땅의 풀뿌리 민주주의와 주민주권의 후퇴라 할 것이다.

독자투고

생계를 위협하는 범죄, 반드시 근절돼야

자영업자를 노린 새로운 형태의 사기 수법이 확산되고 있다. 바로 ‘노쇼 사기’다.

기존의 ‘노쇼’는 예약 후 나타나지 않아 자영업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비매너 행위로 인식돼 왔다.

최근에는 이 ‘노쇼’를 악의적으로 이용해 피해를 입히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범죄행위로 주목받고 있다.

사기 수법은 이렇다. 예인인 매니저나 군부대, 정당 관계자를 사칭해 단체 예약을 한 후 고가 물품의 대리 결제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최근에는 예인 A씨의 매니저를 사칭

한 사람이 식당에 예약을 걸고 “A”가 약주를 원하니 미리 주문해달라. 회식비와 함께 정산하겠다”며 자영업자를 속인 사례도 있었다.

노쇼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칭 인물이나 단체를 의심하는 공통된 수법을 인식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들은 죽박한 시간 안에 특정 물품을 구입해달라고 요구하고, 자신들이 소개한 판매처에 대금을 결제하도록 유도한

다. 예약을 받을 때 예약금을 선결제 받는 제도를 도입하면 노쇼는 물론, 이런 사기 피해도 줄일 수 있다.

‘노쇼 사기’는 단순한 예절의 문제가 아닌, 생업을 위협하는 범죄다.

예약금 제도의 정착과 함께 이 같은 사기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이지호·화순경찰서 경무과〉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피니언

本土說

호남의 절대적 지지 받은 이재명 정부 성공 조건은

이재명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은 국회에서 열린 취임사에서 “위대한 빛의 혁명은 내란 종식을 넘어 빛나는 새 나라를 세우라고 명령한다”며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를 선언했다. 그러면서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를 위한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장기간 이어진 내수 침체에 미국 관세정책 충격파로 수출마저 흔들리는 내우외환 상황이다. 올해 성장률은 0%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행정 비상경제 TF의 역할이 크다. 언급한 대로 3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통해 내수상권의 활력을 도모해야 한다. 저출생·고령화 심화에 따른 인구 감소,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지방소멸이 국가 위기로 부상했다. 규형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광주, 전남의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 임기 동안 실현되지 못한 현안이 막라돼 있다. 광주는 초연결시티를 구축하고 AX 실증밸리, 반도체 등과 함께 모빌리티, 반도체 등을 집중 육성하는 AI 시범도시 조성 사업이 첫번째다. 전남은 국립과대학 설립을 필두로 석유화학·철강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친환경·고부가·AI 산업으로 새판 등 메가 프로젝트가 급하다. 최대 상생 과제인 광주 민간·군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이전은 깔끔하게 정리하겠다는 약속이 이행돼야 한다.

조기 대선에서 이 대통령은 호남의 압도적인 선택을 받았다. 전국 1, 2위의 투표율을 기록한 가운데 당초 목표로 했던 90% 득표율에는 못 미쳤지만 민주 진영의 텃밭임을 새삼 확인했다.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국가 문란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역민의 변함 않은 지지와 성원에 정부가 앞으로 응답해야 하겠다.

또한 취임 일성으로 내건 대통합의 정치를 펼쳐야 한다. 탄핵과 대선 국면을 거치며 진영 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다만 현정 질서를 통째로 부정한 죄악의 범죄, 내란 사법에 대해 선 법과 원칙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 이 대통령은 여대야소 지향에서 민생과 개혁 과제 해결에 속도를 내게 됐다.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입법·행정권력까지 움켜쥐었다. 일각의 우려대로 독주를 경계해야 하며, 대화와 타협에 나서야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입증했다. 6개월 간의 혼란은 끝났다. 흙수저 조차 아닌 ‘무수저’ 소년공 출신의 준비된 대통령이다. 대립과 분열을 넘어 정의와 통합의 시대를 열었다. 조속히 국정 안정에 성공해야 한다. 헌법 정신에 따라 모든 국민이 주인 되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주어진 책임과 사명,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수행해주길 바란다.

또 일가족 비극…지역사회 안전망 점검의 계기로

40대 가장이 대선 전날 밤 광주에서 체포됐다. 전남 진도군 임하면 진도항에서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아내와 고등학생 두 아들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이다. 사전에 가족여행으로 가장했으며, 마지막 순간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었다. 참혹한 범죄다.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조사에서 수많은 빛 때문에 힘들어 함께 생을 마감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한 피의자는 월세로 원룸에 거주 중이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웃들은 공사장에서 철근 작업을 한 성실한 남자로 기억한다. 아내도 평범했으며, 아들도 학교를 잘 다녔던 걸로 알았다. 명백한 살인이다. 가족의 생명을 경시한 잘못된 행위다. 지역사회는 할 말을 잊었다.

앞서 4월에는 아파트 분양사업을 벌여온 50대 가 수십억 상당의 채무에 부담을 느끼 경기도 용인 자택에서 부모와 차자식 등 5명을 살해하고

광주로 달아나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검거돼 충격을 던지기도 했다.

돈 문제 뿐 아니라 중대 질병 등으로 인한 사례까지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다. 잊을만 하면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 사회적 고립 해결을 위한 대책이 곁들고 있다. 가족을 독립적 개체로 보지 않고, 자신과 동일시하는 현상이 여전하다는 반증이다. 지역 공동체가 위기를 조기에 감지하고 대응에 나서겠다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지만 복지 사각지대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실질적인 생활 협편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긴급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부모가 성인이 안 된 자녀까지 소유물로 여겨 죽음에 이르게 했다.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우리 사회의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

온라인 디카시 광장

바리톤

주영길

햇살 빛어 만든 악기

깊숙한 복식호흡
배꼽에서 나오는 저음

심금을 울리는 뭉쿨한 전율



※ 시작노트

스승의 날 클럽 회원들과 고장 고인돌 공원에 가

열차를 타고 한 바퀴 돌았다.

풍천 장어로 점심을 들고

카페 갔는데 정원에 피어 있는

이꽃을 보니 옛날 브라스밴드

공연이 생각났다. 그 깊숙하고

목직한 음률이 울리는 것만 같아

찰칵 디카시 한수를 울조렸다.

/광주디카시인협회 제공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 역 특 집 부 650-2060	FAX 650-2099
정치부 650-2030	사 진 부 650-2080	광고국 650-2070
경제부 650-2050	논 설 실 650-2006	경 영 지 원 국 650-2011
사회부 650-2040	T V 본 부 650-2009	사 업 본 부 650-20